

POLITICS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한 총리 탄핵 기각’ 놓고 여야 날선 공방

염규승 광주신보 이사장 후보 능력 검증...시의회 인사 청문

광주신보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광주시의회인사청문특위는 염규승 후보자(사진)에게 보증사고 감소와 보증 지연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규순 의원은 “재단의 미회수 채권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건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로 어떤 업종에서 대외변제 사고가 잦은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후보자는 “자산 규모 1조1400억원 중 재단이 생긴 이래로 쌓인 채권이 2200억원”이라며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중 세종과 광주가 감사 부서가 없어 광주시에 인력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영노 의원은 “비대면 보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와 채권 관리 담당 인력은 그대로”라며 “다른 지역처럼 비대면 보증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염 후보자는 “현재 재단 총원이 60여명인데 감사 인력 2명, 비대면 전담 인력 3명, 관리 인력 등 최소 6명 이상 증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후보자는 기본 재산 확충과 보증 능력 확대,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지원 강화, 자산 건전성 제고, 윤리 경영과 열린 경영 실현 등을 공약했다.

염 후보자는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5~2023년 광주은행에서 하남공단 1금융센터장, 영업3부부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비상부이사로 활동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31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대비 내달 7일까지 업소 위생관리

광주시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강아인) 선수권대회’를 대비해 25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장과 연습장, 선수단 숙소 주변 외식업소 50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명을 7개 반으로 편성, 외식업소 500곳에 대한 현장 사전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식품 보관온도 준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음식물 제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기타 식품 위생법 준수 등이다.

이번 현장 사전 위생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 계도와 재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9월 세계양궁 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식중독 예방과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종사자 자율 위생관리 역할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 외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 “국민이 납득할지...신속尹선고해야” 국힘 “87일 국정마비 국민 앞 석고대죄를”

여야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결정이 야권에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약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현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오늘 현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의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재확인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의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탄핵 기결 요건을 ‘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현재 판단에 대해 노종현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 정점에서 현재가 한 권 헌법재판이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재적의 3분의 2”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이나 후시 모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은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기대감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기대감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앞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권 중에서도 ‘이재명 책임론’ 띄우기에 가세했고, 일부 인사들은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졸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현재가 더 이상 지체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마은혁 임명’ 촉구

SNS 통해 밝혀...“계엄 막지 못한 것 국민께 사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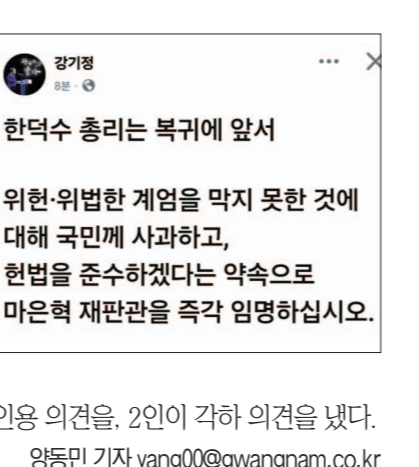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라고 밝혔다.

현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시·군 축제 전문가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

도, 11월까지 15개 축제...기획·콘텐츠 개발 등 맞춤 지원

전남도는 올해 시군 대표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컨설팅은 시군별 대표축제의 기획력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컨설팅에는 국내 축제 및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5인의 컨설팅단이 참여하며, 총 15개 시군의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이완복 오산대학교 교수,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최영화 호남대학교 교수, 정영근 프리랜서 감독 등이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축제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바라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15개 대표축제는 △축제 기획 및 콘텐츠 개발 △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 △

축제 운영 및 역량 강화 △축제 효과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대표축제는 매년 실시하는 시군 대표축제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됨에 따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문가 컨설팅이 지역축제의 기획력을 높이고 운영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축제 발전을 위한 컨설팅과 평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 지원

올해 신규 33건 추가 목표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

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수목제품이용 △별기령 연장 △산림경영상업 △수종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메이커업 △산불방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에

회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000만원, 모니터링 시 1400만원, 검증 시 500만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에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 277건의 면적은 1만 7639ha에 이르며, 예상 연간 탄소흡수량은 29만2000tCO2이며, 예상 총흡수량은 686만8000tCO2에 달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

“8년 전 탄핵선고 현재 앞 구급차 76번 출동”

양부남 의원 “경찰·소방 만만 대비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 을·사진)은 24일 “국회의원에겐 계란 투척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탄핵 선고 날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충돌의 전조”라며 “지난 2017년에도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현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도중 백해련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던진 날개칼에 맞는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8년 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폭력사태의 징후가 가득하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이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 10일 현재 인근에서 발생한 구급 상황은 총 76건이었다.

9명은 현장 처치로 끝났지만 67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시진 민집 구역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 양쪽 무릎, 허리와 다리 및 골목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는 구급대를 부르는 경우도 오전보다 급증했다.

실제 서울소방본부에 집계된 이날 구조를 요구한 연령은 △50대(9명) △60대(21명) △70대(13명) 등 장년과 노년층이 절반 이상(56.6%)이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서왕진 “부자감세 논란 땀가...조세정의 확대를”

대한민국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하위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자 광주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비례대표·사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직 포기 청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노인 빈곤 등 현실을 거론하며 부자감세 경쟁을 벌이는 정부와 거대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와 복지 지원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2022년 18%로, OECD 31개국 중 28위인 데다 31개국 평균 32%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조세 제도와 정부의 이전소득 등 복지정책을 통해 얼마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지표”라며 해당 수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통계라는 점을 들어 “3년간의윤석열 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며 “중부세, 법인세, 상속세, 금투세 등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의 세금은 대폭 줄이거나 심지어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을 통한 이전소득 확대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속세 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